

尹 향한 수사 칼 끝... 긴급체포 이뤄지나 '촉각'

경찰 '12·3 내란' 수사,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청사 진입은 못해
경찰·공수처·국방부,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 제외
尹, '하야보다 수사·탄핵' 대비... 버젓이 인사권 행사 변호인 타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난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6면>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자신들의 수뇌부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까지 된데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검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야' 등 조기 퇴진 보다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법리다툼을 통해 시간을 벌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집계 중인 윤 대통령은 수사·탄핵을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 난립으로 중복 수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앞서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해당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사 내 진입은 하지 못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거부된 이후로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였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전면적인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청사 등이 대상이다. 합참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지하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된 장소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또 긴급체포 상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이날 새벽 경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 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내 이들의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경비대 등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압수수색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시한 퇴진 로드맵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내란 상처' 국민에 위안을 주다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민주, '尹 탄핵안' 발의...우 의장, 국정조사·특검 명단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표결하는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무차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73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박연수·설혜경·이정우
光州日報社

남도의 맛갈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거리

맛있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남도음식거리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